



# 규제개혁과 산업구조혁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

2017. 03. 15



## Contents



### 규제개혁과 산업구조혁신

- I 건설 경쟁력을 잃다.
- II 규제의 요람 건설산업
- III 건설산업 규제 개혁의 실패원인
- VI 주요 개선방안
-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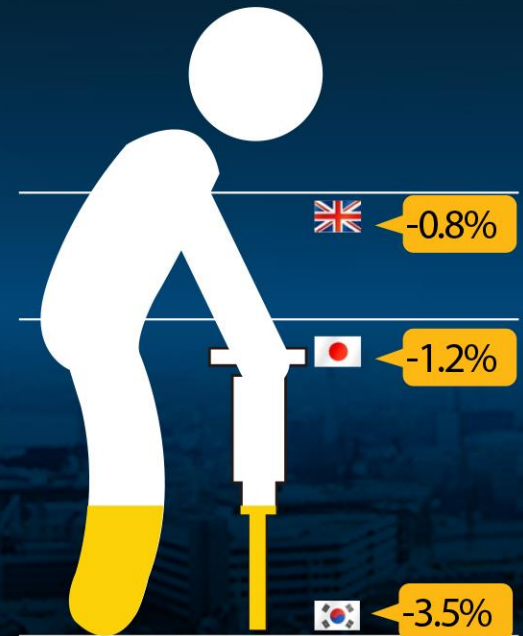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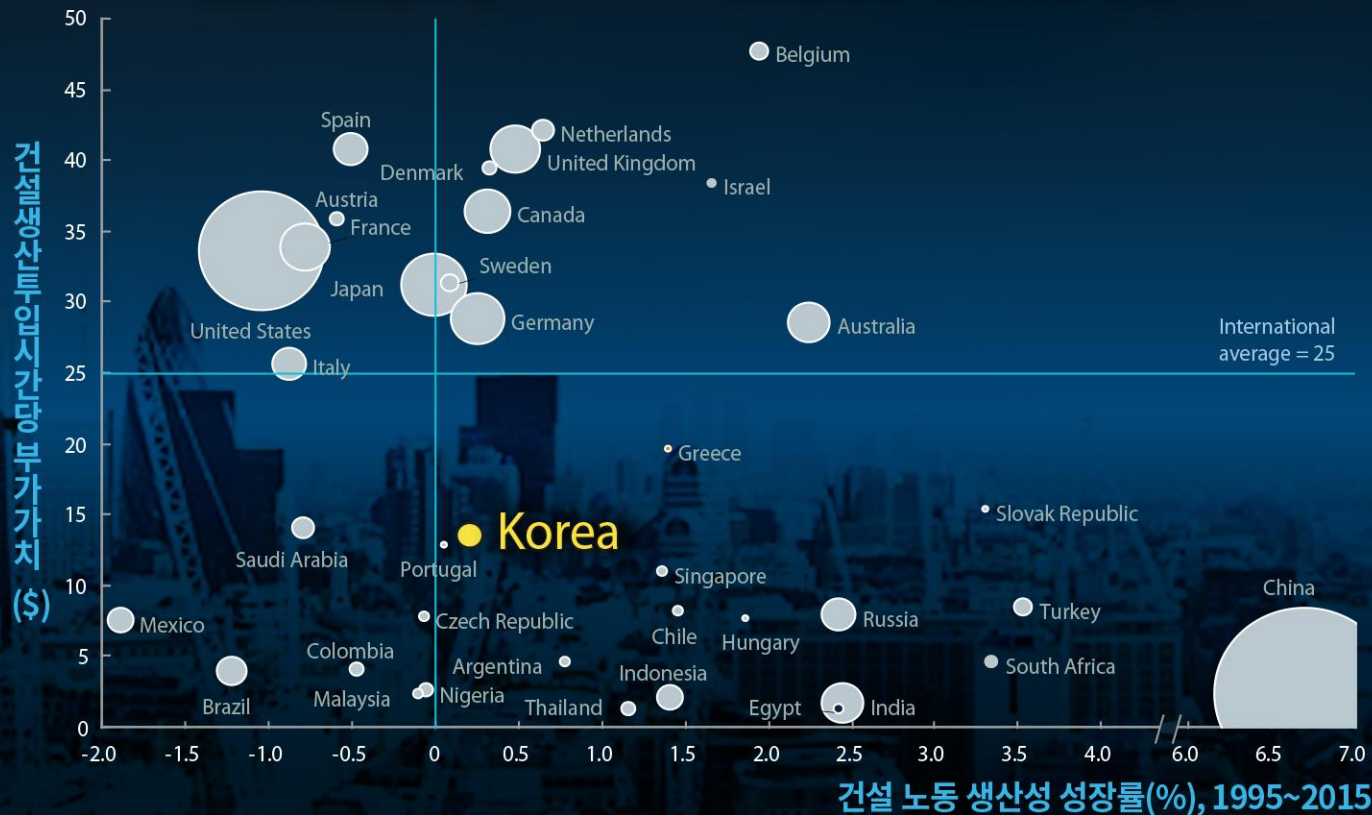
# 우리 건설은 지금...

## 우리나라 건설업 생산성, 지난 20년간 정체

우리나라 건설생산성  
선진국의 1/3 수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생산성 41개국 중 19위

전 산업 생산성 성장률 대비  
건설생산성 성장률 차이  
41개국 중 40위 (1995~2015)



주: 2015년 기준, 구매력 평가지수(PPP) 미고려, 원의 크기는 국가별 건설투자액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17.02), Reinventing Construction: A Route to Higher Productivity



# 건설, 경쟁력을 잃다: 기술경쟁력

## 후진국형 제도와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글로벌 경쟁력 상실 심화

순위	건설시장 안정성	건설 제도	인프라	시공 경쟁력	설계 경쟁력	가격 경쟁력	종 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우리나라 건설기업 역량  
**전세계 4위**(시공, 설계, 가격경쟁력)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  
**전세계 12위**(시장안전성, 건설제도, 인프라)

시공경쟁력 4위 vs. 설계경쟁력 8위

주요 하락 지표

건설제도 **12위→13위**

정책결정의 투명성 **18위**

부피인식지수 **13위→14위**

가격경쟁력 **5위→7위**

(전년도 대비)

주: 부문별 20위까지 순위가 발표되나, 15위까지만 표기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7),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평가



# 건설, 경쟁력을 잃다: 과당경쟁과 경영환경 악화



**건설업체 수**  
(종합+전문+설비+시설물+주택)

연평균 업체 증가  
1,434개

2000년  
39,801개

2015년  
61,313개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

2007년  
6.4%

2015년  
0.7%

주1: 2000년 건설업체 수(39,801개) = 종합(7,978개) + 전문(27,364개) + 설비(4,459개) + 주택(3,744개)

주2: 2015년 건설업체 수(62,640개) = 종합(11,220개) + 전문(37,872개) + 설비(7,062개) + 시설물(5,159개) + 주택(6,501개)

주3: 겸업 허용 등으로 1개의 업체가 복수업종의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1개사로 계상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각년도(각협회 통계자료 재인용)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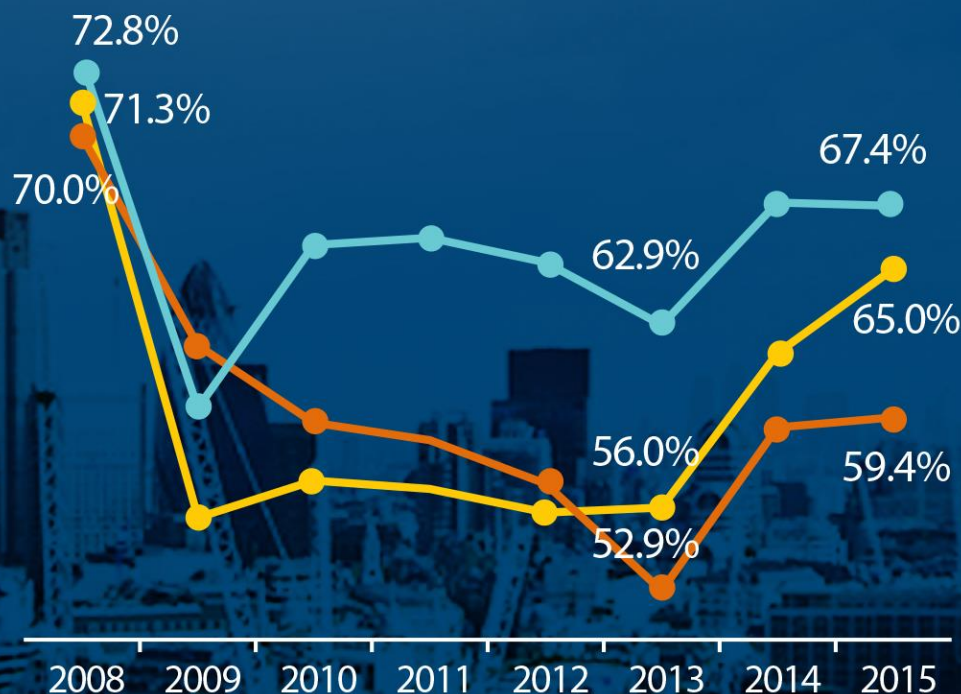


# 건설, 경쟁력을 잃다: 취업률 감소, 우리미래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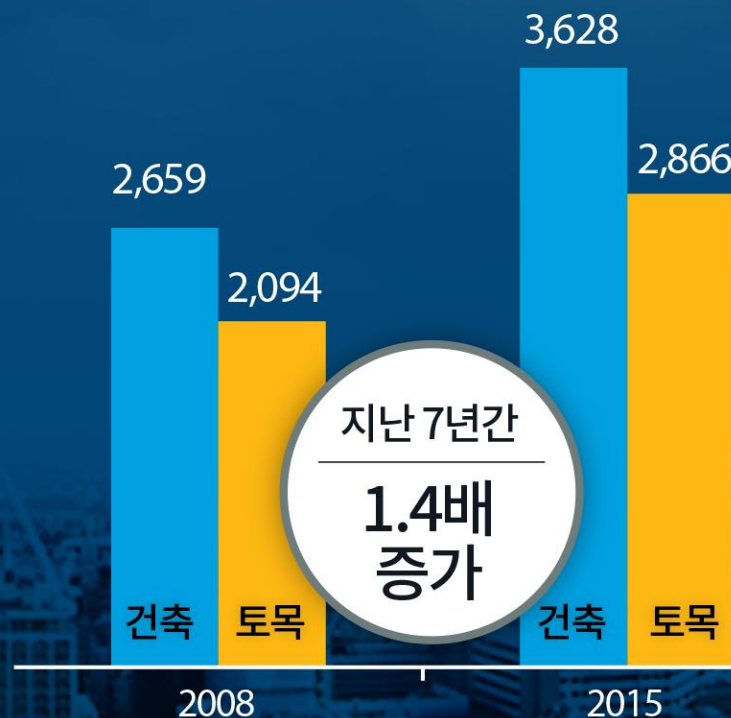
##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 전문대학 등) 건설관련 학과 취업률

토목 · 도시    건축    기계 · 금속



## 고등교육기관 건설관련 학과 미취업자 수

(단위: 명)



주1: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X 100, 2010년 이후로는 취업자에 해외취업자 및 교내취업자 포함  
 주2: 고등교육기관(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4년제), 기능대학) 졸업생 및 취업자 대상 전수조사 결과  
 주3: 2015년 12월 31일 기준, 2008년의 경우 4월 1일 기준, 2009~2014년의 경우 6월 1일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주1: 미취업자 = 졸업자 - (취업자 + 진학자)  
 주2: 건축관련 학과: 건축학과, 건축 · 실비공학과, 조경학과 등  
 주3: 반면 동 기간 내 건설관련 졸업자는 466명 감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 건설, 경쟁력을 잃다: 업역·업종 간 대립 심화

물량확보 목적의 **업역 이기주의**

실질적 경쟁 통한 산업발전 등한시..  
업종 내부 **‘나눠먹기식’** 구조 형성



여러 번의 **업역폐지 시도...기회를 놓치다**

’95년 건설제도개혁 기획단의 건산업 제정 시 업역별 개별 특별법  
일원화 실패..건설면허제도 개선 실패

건설경제, 2015.02.09 등

’06년 건산업 개정안과 ’08년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시 논의되었던  
업역 폐지 · 완화...’10년 국무회의 원점 부활



분리발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등...**업계간 대립과 갈등 증폭**

분리발주 의무 공정(전기공사 등) 외 기계설비 등 타 공종 분리발주  
시행 요구 확대...지자체 조례제정 증가, 업계 간 집회 등 대립 심화

뉴시스, 2017.02.22 등

최근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등 관련 협회 분리발주  
확대 시행 목적 시설공사업단체 연합회 창립(2017.02.09)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시행,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 업역 간 다툼 최근 급증세



45년이 넘는 해묵은 숙제...**업역규제 폐지 요구 확대**

업역규제는 고도성장 기 물량 배분과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  
목적의 제도...협력을 통한 시너지나 융 · 복합 기대가 불가하기에  
저성장 탈피 위해 산업구조 근본 혁신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 필요

한국경제, 2016.09.13 등

**‘칸막이식 업역’ 울타리, 수주·생산체계 옥죄다**

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2부-현실을 직시하자

화없는 생산구조 (하)

기사일력 2016-09-12 18:02:58

[전문가 포럼]

**시대착오적인 칸막이식 건설산업 구조 개편해야**

입력 2016-09-12 18:02:58 | 수정 2016-09-13 03:54:58 | 지면정보 2016-09-13 A33면

한경 스타트업 주식자금 대물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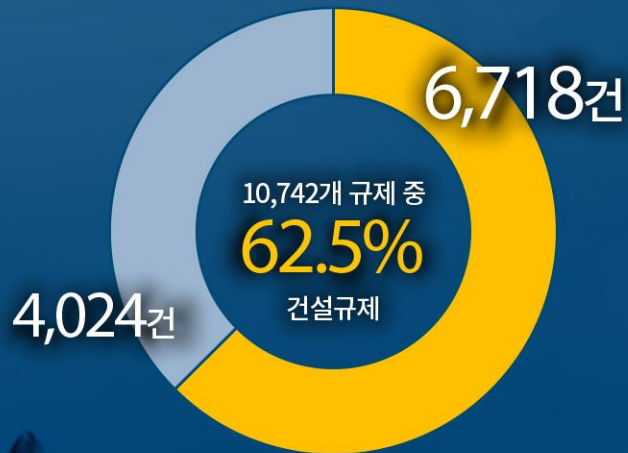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 시대

원문보기



# 규제의 요람( 搖籃 ), 건설산업

## 건설관련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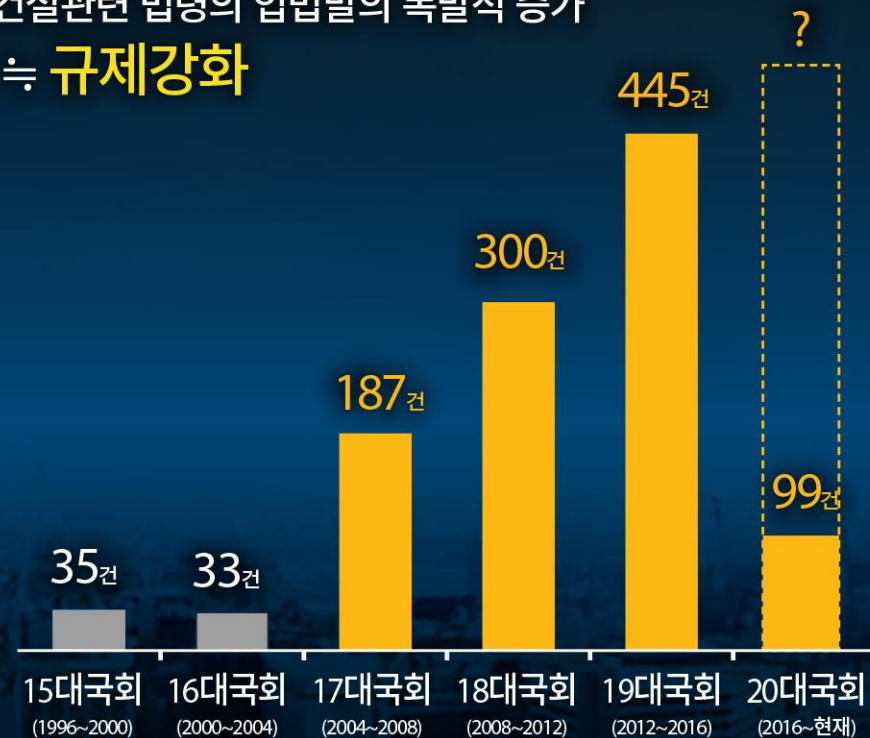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중 건설관련 규제 현황

(단위: 조문기준 규제 수, 2017.02.24 기준)

구 분	전체 국토부 소관 규제	건설관련 규제
법률	1,928	1,223
시행령	1,297	1,006
시행규칙	1,401	672
행정규칙	3,963	1,753
자치법규(지방조례)	2,153	2,064
계	10,742(100%)	6,718(62.5%)

## 주요 건설관련 법령 입법발의 현황

17대 국회 이후  
건설관련 법령의 입법발의 폭발적 증가  
≡ **규제강화**



주1: 건설관련 주요 법률(건설법, 건설법, 건축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주택법, 시특별, 건축사법, 민간투자법 등) 대상

주2: 입법발의가 곧 규제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일부 개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법발의안이 규제 강화의 내용임.

자료: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주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조문 기준(동일 조문 내 복수의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1개 규제조문으로 계산)

주2: 부처별 규제법률 수 기준으로 국토부(99개)가 타 부처대비 압도적(타 부처 평균 22.7개 규제법률 운영)



# 참고자료: 하도급 규제 현황

## 우리나라는 사후 분쟁 해결 및 처벌 중심의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를 운영 중 [국가별 주요 하도급 규제 현황]

주요규제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직접시공 의무제	○	○	○	×	△	×	×	×	×	×	×	×
일괄 하도급 금지	○	○	○	×	○	×	△	×	△	×	○	△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	○	○	×	×	×	×	×	×	×	×	×	×
재하도급 금지	○	○	×	×	×	×	×	×	×	×	×	×
하도급 내용 (발주자) 통보	○	○	○	×	○	×	○	×	○	○	○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	×	△	×	×	×	×	×	×	×	×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준수	○	○	○	○	○	△	○	○	○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	○	×	×	×	×	×	×	○	○	○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	×	×	△	×	△	×	○	○	×	×
하도급 대금 동일 조정	○	○	×	×	×	×	×	×	×	×	×	×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의무화	○	○	×	×	×	×	×	×	×	×	×	×
하도급계약 서면 계약 의무화	○	○	○	○	○	×	○	○	○	○	○	○
하도급공사 계약 자료의 공개	○	×	○	×	○	×	×	×	×	×	○	○
징벌적 손해배상	○	○	○	○	×	×	○	○	×	×	×	×
정부 표준 하도급계약서 활용	권고	권고	×	×	×	×	×	×	×	×	권고	권고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	×	×	×	×	×	○	×	○	×	×	×

주 : ○ 의무사항, △ 제한적 의무사항, × 관련 규제 없음

자료 : 전영준(2017), 해외의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과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건설업계 규제 개혁 체감도 거의 '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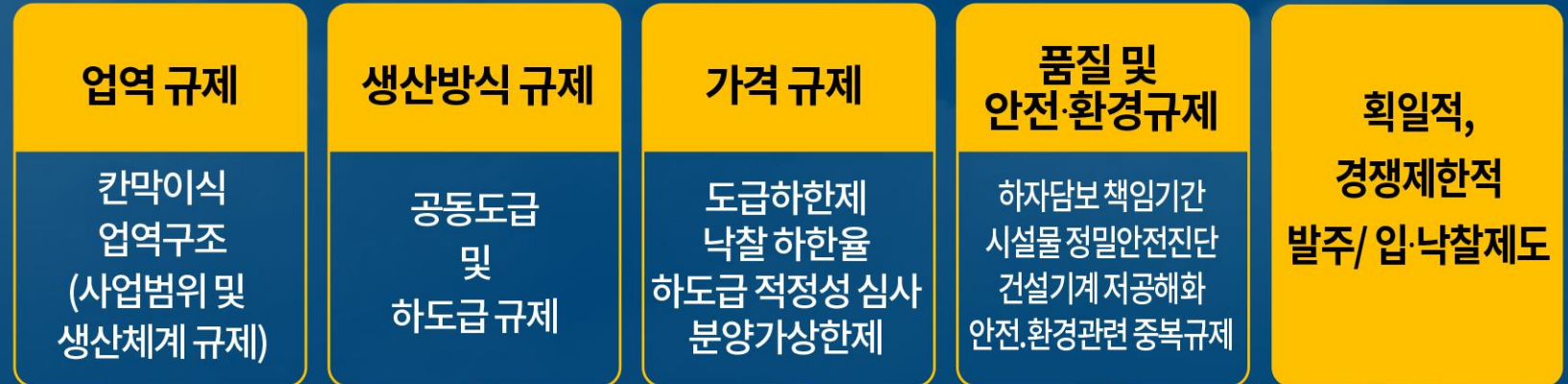


손쉬운 규제 완화 外 산업구조 개선 등 건설산업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규제 개혁 부재



# 건설산업 규제개혁의 실패원인

## 주요 규제현황



## 규제개혁의 실패원인



변화가 없는 우리 건설산업,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



# 개선방향: 건설산업 핵심 규제 50% 폐지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 **50%** 폐지 · 완화

-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덩어리 규제**,  
법률간 연계가 긴밀한 **5대 주요규제 대상**  
(업역규제, 생산방식 규제, 가격규제, 품질 및 안전·환경규제, 경쟁제한적 발주제도)
-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추진



## 정부와 산업간 협력을 통한 규제의 틀(Framework) 재편 : (가칭)국가건설리더십위원회 설립

### 설립 목적

(전략적 접근) 업계의 건의를 단순 받아들여 시혜적으로 처리해주는 규제 현실화 지양,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목적

(혼합형 접근) 정부와 산업간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한 위로부터의 규제개혁(Top-down)과 기업 스스로의 산업 구조 변화 유도(Bottom-up)

(지속성 확보) 정책담당자의 변경과 순환보직 한계에 따른 건설산업 정책의 단절 극복

### 주요 활동 방향

#### 방안1 건설규제개혁 기관 설립

- ① 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 ② 규제개혁 추진실태 점검 및 사후평가 · 관리
- ③ 교육과 홍보(이해관계 집단에 대한 합리적 설득과 조정)
- ④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언론 등 외부의 관심과 지원 확보

#### 방안2 규제개혁 + 산업혁신 기관 설립

규제개혁 + 건설산업 발전 정책 수립

- ⑤ 정부, 민간 공동 산업발전 방향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정
- ⑥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 활용 전략 수립
- ⑦ 건설산업혁신 성과측정, 시범사업 등의 평가 · 관리
- ⑧ 투명성 제고 및 올바른 건설문화 창달

### 조직 구조

관계 부처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조정 ·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법정 민 · 관 합동조직 구성**(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한시적 기구 운용 지양, 독립적 지위 부여)



# 참고자료: 미국과 일본의 규제개혁, 건설혁신 동향

미국: 산업발전을 위한 **강력한 규제개혁** 지속 추진, 영국: 규제개혁과 함께 **건설산업 혁신활동** 지속

## 미국의 기존 규제개선 체계

### · 행정부 주요 규제개선 사항

- 정부 규제의 정기적 심사 도입(카터)
- 규제영향분석(RIA) 도입, 규제개혁TF 신설, 규제심사전담 기관(OIRA) 대통령 직속 신설(레이건, 클린턴)
- 규제시스템 개선 확대(규제 재검토, 규제 수 감축, 오바마)

### · 입법부: 의회심사법을 통해 양원(상원, 하원) 규제 별도 심사

## 최근 트럼프 정부 규제개혁 추진현황

- 불합리한 규제 판단 기준: “규제가 미국 근로자에게 이로운가?”
- **주요 조치 현황**(정부 출범 이후 6주간 90개 규제 완화·폐지)
  - 규제심사과정의 일시적 중단, 연방정부 내 규제개혁TF 신설
  - One-In, Two Out(규제개혁 어젠다 강화) 행정명령
  - 금융, 제조업, 환경 분야 규제 완화·감축 조치 시행



“의회와 행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규제 과정 내 **이해관계자 참여 강조**”

## 영국의 최근 규제개선 체계

- 2011년 이후 One-In, One-Out 제도 도입
- 2013년 이후 One-In, Two-Out 제도 도입
- **모든 규제 6개월 단위(4/6, 10/1) 동시 공표**(기업예측성 강화)
- 규제관리전담기관 운영(BRE, BRDO 등) + 의회 내 별도 기관 운영

## 영국의 건설혁신 운동(1994~현재)

- 성과측정 기반의 건설산업 혁신운동 추진(12건)
  - Constructing the Team(1994)
  - Rethinking Construction(1998)
  - Accelerating Change(2002)
  - 
  - Construction 2025(2013)
  -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16~'20(2016)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중심 활동”  
“**목표 공유**를 통한 **장기** 산업 혁신운동 추진”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저가 유도 방지 → 안정적 사업환경 마련, 건설산업구조 개선 기반 구축

## 사업계획~발주단계

### 저가 낙찰 개선

- ①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 (현행) 80~87.75% → (개선) 85~95% 상향
- ② **지자체 계약심사제도 폐지**  
: 부족 예산에 맞춘 설계가격 삭감 형태 계약심사제 운영 개선
- ③ **3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 ④ **정부의 예산절감(삭감) 기초 개선**  
: 목표 공사비 책임주체 발주자(소요기관) 일원화  
: 회계예규 내 발주자 자의적 예정가격 삭감 금지 명문화
- ⑤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개발**  
: 발주기관별 개산·상세건적 등 방법 개발 및 DB 구축
- ⑥ **전체 공사비 적정성 확보 추진**  
: 예가 확정 전 외부 전문기관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절차 도입

## 시공단계

###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 ⑦ **기초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산정 오류 시 재입찰·재공고

### 공사 예비비(Contingency) 제도의 도입

- ⑧ **총사업비 대비 일정비율 예비비 책정**  
: 공사비와 분리된 별도의 계정 신설(물가상승비, 예비비 계정)

###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제도 현실화

- ⑨ **간접비 산정 방식 개선(모호한 현행기준 개선)**  
: 추가비용 산정기준 실비 정산 원칙 확립  
: 우월적 지위 행위 금지를 통한 공정한 추가비용 보상체계 마련

발주처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 미승인 사례 조사 결과  
: 계약금액 조정 거부(69.2%), 시공사 조정 청구 자체 포기(26.7%),  
기획재정부 반려(10.8%)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6)



건설산업 관련  
108개 업종·업역

### 부처별 특정 업종·업역 보호를 위한 법률 현황

부처명	소관법률	관련 업종·업역
국토 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종합건설업(5종), 전문건설업(29종)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19개 세부분야)
	건축사법	건축사사무소
	시설물안전법	안전진단전문기관(5개 분야)
	주택법	주택건설업
	지하수법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공사법	전기공사업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계업(3종), 전기감리업(2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관련 13종)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환경전문공사업(3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법	하·폐수재이용시설 시공업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법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건설폐기물처리업
미래창조 과학부	기술사법	기술사사무소
	정보통신공사법	정보통신공사업
국민 안전처	소방시설공사법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3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 수리공사업 (8종), 문화재감리업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	산림사업법인

주 : 건설사업관련 활동(설계, 시공, 사업관리 등) 기준 별도 등록·신고를 명시한 법령 발체

### 문제점

#### ▶ 소관 부처/부서별로 특정 업종/업역 보호를 위한 법/제도/규제

- 급속한 환경 변화대처 난해, 산업 내용·복합한계
- 업역 진입 및 행위규제로 경쟁의 회피를 제도적으로 보장
- 건설공사의 범위가 불완전하여 인허가, 발주, 하도급 규제 등 상이

#### ▶ 제로섬(zero-sum)의 소모적 업역 분쟁이 발생하고, 발주기관의 재량권 위축 및 사업의 비효율화 초래

- 전기/통신공사 타공사와 통합발주 금지(분리발주 의무화)
- 건축설계업 진입 규제(건축물 설계 독점 권한 부여)

### 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해 건설관련 업종·업역 통합 관리

#### ▶ 복잡다기한 건설관련 법령 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규제체계 마련

\* 공업발전법(제조업), 전기통신사업법(통신법), 자본시장통합법(금융업) 사례 참고

#### ▶ 건설관련 업종, 입찰참가 요건 개정으로 상호진입 기준 마련

- 등록업종의 업무내용에 따라 시공자격 인정, 양방향 진입 허용 추진
- 건설업체가 건축사 보유 시 신고 절차를 거쳐 건축설계업 허용
- 전문공종 분리발주 여부는 발주기관에 재량권 부여  
(민간공사 의무 적용 배제)



### 포퓰리즘적 약자 보호가 아닌 발주자, 2차 협력자를 포함한 **소 사업참여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발주자, 원·하도급 간 거래관행 개선, 장기 협력체계 구축

- 공공발주자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Control Tower** 구축(발주자)
  - 국토부 중심, 행자부(지자체), 교과부, 산자부, 국방부 등 포함
- **민간공사 발주자**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발주자)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활용성 강화, 불합리한 조항과 불공정 특별약관 개선
- **원도급자** 불공정 행위 관리·감독 강화(원도급자)
  - 발주기관별 원·하도급 불공정 관행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
- **2차 협력자**에 대한 보호 강화(하도급자)
  - 자재·장비대금지급보증제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 발주자, 원·하도급자 간 장기 협력체계 구축 (발주자, 원·하도급자)

#### 하도급 규제 완화 및 건설하도급 법률 일원화

-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의한 **중복적 규제**의 개선
  - 공정위 및 국토부 위임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59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관련 규제 개선 포함
- 건설하도급 **법률**의 **일원화**
  - 건설생산체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에 관한 일반법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제 일원화



폭넓은 규제개혁 **협력체계**와 규제정비 **로드맵 구축**을 통한 산업혁신과제의 도출과 개선 추진



시장친화적  
규제체계 확립

- 중복, 과잉적 행정제재의 개선 및 실효성 제고
- 비재정 위임사무 규제 정비를 통한 실질적 규제 체계 마련
- 표준도급계약서의 불합리 조항 개선
- 과도한 신고, 인허가사항 지속적 발굴·감축

⋮



규제의  
사회적비용  
합리화

- 건설공사신기술 의무 적용제도의 합리적 운용
- 공공공사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 부적격 업체 근절을 위한 건설업 등록 요건 개선
- 공사이행보증제도,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시스템 개선

⋮



산업경쟁력  
저해 중복규제  
통폐합

- 건설관련 직, 간접적 중복규제 (169건) 개선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개발 (수질환경보전법 외 8개 법률)
  - 하도급 관련 규제 (하도급법 외 4개 법률)
  - 건설현장 안전관련 규제 (건진법 외 5개 법률)
  - 건설업종 동반성장 평가 등 (공정위, 국토부 중복 제도)



##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기술경쟁 촉발, 해외사업 경쟁력 확보, 건전한 성장 유도

### 1) 발주자(수요기관)의 재량권 강화, 융합형 발주 방식 확대

#### 현황

- 기계적이고 획일적 발주방식 규정  
- 회계예규 내 획일적으로 발주방식 선택, 평가항목과 배점 규정
- 물량 배분 정책에 기반한 분리형 발주방식 정책  
(설계시공분리, 주계약자 공동도급, 분리발주 등)

#### 개선

- 발주방식이나 평가항목, 배점 등을 수요기관이나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화(수요기관책임평가제)
- 산업 체질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및 IPD 발주 확대

### 2)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 현황

- 지역제한제도(추정가격 종합 100억원, 전문 5~10억원 미만)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245억원 미만, 49% 이상)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시 PQ가점, 도급하한제도 등

#### 개선

- 대/중소기업간 공동 도급 실효성 확보(기술이전 등)
- 중소기업 물량할당(미국, 영국 사례)
- 과잉자격(Over-Qualification) 제한, 등급제한 입찰 세분화

### 3) 장기계속공사의 계속비 공사 전환\*

#### 현황

- 장기계속공사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기지연, 총사업비 증가, 정치적 낙담 등의 문제가 심각  
\* 사업기간 증가 : 계속비(0.2년) vs. 장기계속공사(4.9년), 감사원(2005)

#### 개선

- 선형공사를 제외한 댐, 발전소, 건축공사 등 사업전체가 완결되지 않으면 시설물의 건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전체를 계속비로 편성

### 4) 설계 · 엔지니어링 발주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 현황

- 가격 중심의 선정 방식 운용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중심제)  
→ 기술력과 경쟁력 저하, 영세화 유발, 해외시장 진출 한계

#### 개선

-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발주방식 구분 적용, 소규모 사업인 경우 평가방식 간소화, 사업수행 성과 사후평가 강화 등

\*자료: 최민수(201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 우선추진이 시급한 과제 List -(1)

필요 정책		세부 과제	관련 법안	복수법령
산업구조 개선	경직적 영업범위 개선	1. 건설산업의 경직적 영업범위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외 16개 법률 개정	✓
		2. 「건설산업통합법」의 제정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외 31개 법률 개정	✓
		3.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영업범위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또는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발주제도의 선진화	4.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융합형 발주제도 확대	국가계약법 외 2개 법률 개정	✓
		5. 설계·엔지니어링 발주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국가계약법 외 3개 법률 개정	✓
	부적격업체 근절	6. 부적격업체 근절을 위한 건설업 등록 요건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7. 공사 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행정규칙(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외 1개 개정	✓
업역질서정상화 기반 마련		8. 분리발주제도의 합리적 개선	전기공사업법 외 5개 법률 개정	✓
		9.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개선	국가계약법 외 1개 법률 개정	✓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업환경 마련		10. 공공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 저가낙찰의 개선	국가계약법 외 1개 법률 개정	✓
		11.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 및 기준의 합리적 개선	국가재정법 외 3개 법률 개정	✓
		12.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방안	국가계약법 외 1개 법률 개정	✓
		13. 공사 예비비 제도의 도입	국가재정법 외 3개 법률 개정	✓
		14.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 간접비 보상제도의 실질적 운용	국가계약법 외 1개 법률 개정	✓

주: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제시된 법안 제 개정 외 시행령과 시행규칙, 예규, 지자체 조례 등의 동시 개정이 필요함.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03 발간예정), 새 정부 건설 및 주택 정책 과제 일부 발췌



## 우선추진이 시급한 과제 List -(2)

필요 정책		세부 과제	관련 법안	복수법령
원·하도급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공정거래 촉진		15. 발주자,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촉진	하도급법외2개법률	✓
		16. 하도급 규제 완화 및 하도급 법률의 일원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
합리적 상생협력 기반 마련		17. 하도급 계약 이행 보증 시스템의 개선	하도급법외3개법률 개정	✓
		18.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보증 제도의 도입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규제 정비	시장친화적 규제 체계 확립	19. 건설부문 행정제재의 개선 및 실효성 제고	국가계약법외5개법률 개정	✓
		20. 표준도급 계약서의 불합리한 조항 개선	행정규칙(공사계약일반조건)외2개 개정	✓
	규제의 사회적 비용 합리화	21. 건설공사 신기술 의무 적용 제도 운용 개선	건설기술진흥법	
		22. 공공공사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개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주: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제시된 법안 제·개정 외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 지자체 조례 등의 동시 개정이 필요함.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03 발간 예정), 새 정부 건설 및 주택 정책 과제 일부 발췌



# 結:관건은 일관성·지속성

지속적 건설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책의 양산”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new normal)에 걸맞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정책의 틀”** 변화 필요

## 핵심 원칙

- **정부와 산업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구체적 산업혁신 추진  
규제개혁은 일시적·일회성이 아닌 장기 과제:강력한 리더십 바탕 지속적 정책 추진 필요
- 규제개혁의 **실행주체 명확화**: “모두의 책임은 무책임”
- 규제개혁, 산업구조 개선은 실행을 위한 **로드맵**이나 **정책 수단** 마련 필요  
인프라 투자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전 산업 측면의 체질 개선 선행이 중요
- 시대착오적이거나 퇴행적, 포퓰리즘 성격의 규제 내용은 과감히 개선



감사합니다

---

